

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seogil.chang@kotra.or.kr)

2023.05.12.(금) 제23-052호

- ◆ [Focus] G7 회의, 러시아·중국·비핵화 주요 안건으로 거론될 듯
- ◆ [What's News]
 - (IRA) 재무부, IRA 청정에너지 추가 세금혜택 관련 세부 지침 발표
 - (TTC) 미국-EU 4차 무역기술협의회(TTC) 주요 예상 의제
 - (수입규제) 상무부, 반덤핑·상계관세 집행 강화 목적 규정 개정안 발표
 - (투자) 美 상무부, 지역 기술 및 혁신 허브(Tech hub) 유치 신청 개시
- 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[정치경제] G7 회의, 러시아·중국·비핵화 주요 안건으로 거론될 듯

□ 2023 G7 정상회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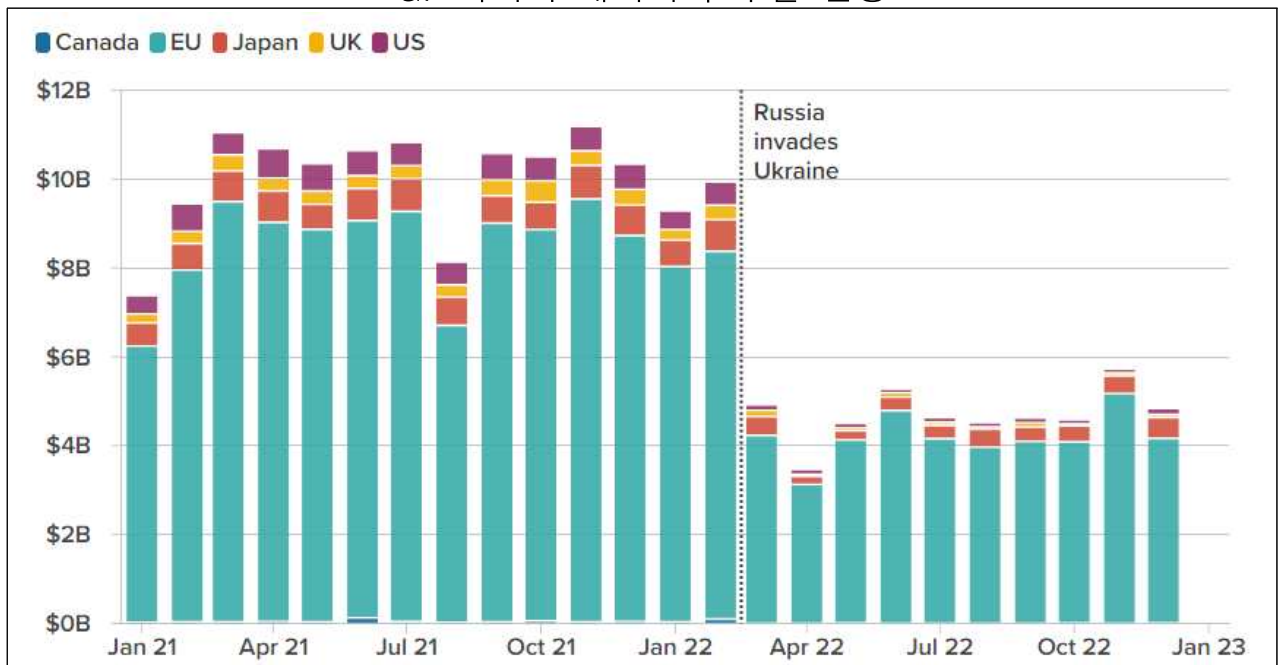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2023년 G7 정상회의,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(5.19~21)
 - 개최국이자 의장국*인 일본을 포함, 미국, 영국, 캐나다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 등 7개국과 EU에서 참가할 예정이며
 - * 내년에는 이탈리아가 의장국을 맡을 예정
 - EU 대표 외 대한민국, 호주, 브라질, 인도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코모로스, 쿡제도* 등이 초청받음
 - * 코모로스는 아프리카 연합, 쿡제도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 대표로 참석
 - 러시아는 G8으로 개편된 1997년부터 참석을 해왔으나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참가 자격 정지
- (안건) 러시아-중국-비핵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
 - CSIS는 이번 G7 주 목적을 ①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과 ②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아웃리치로 제시

□ 주요 논의 예정 안건

①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

- 러-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추가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
 - 애틀랜틱 카운슬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G7 국가들은 468억 달러의 재화를 러시아로 수출
 - 미국은 인도주의 필요에 따른 일부 물품을 제외한 쏘 품목에 대한 對러 수출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
 - * 전면 제재 시 G7의 월 평균 대러 수출은 15억 달러 수준($\Delta 67\%$)이 될 전망
 -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요청에 일본 및 EU측 협상단이 전면 수출 제재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의견을 주었다고 보도
 - * 미국(월 \$8천만)과는 달리 EU(월 \$44억)와 일본(월 \$3.8억)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
 - 이에 ①민수품 군용전환, 3국 경유 수입 등 제재 우회 시도 차단과 ②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하향 등이 대안으로 거론

< G7 국가의 대러시아 수출 현황 >



[자료] 애틀랜틱 카운슬(Atlantic Council)

②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견제

○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안 마련

- 로이터는 이번 G7은 반중 동맹 결성의 장이라기 보단 중국발 리스크 절감(de-risking)에 집중할 것이라 보도
 - * 단 최종 선언문에 de-risking이라는 표현이 담길지는 유보적인 것으로 보여
- 2017년 이래 중국은 개도국 등에 대한 대외 개발 용자 관련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자리매김
- 지난 4월 IMF-세계은행 춘계 총회에서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대출 관행에 문제 제기, 빈곤국 부채 조정에 중국의 참여 촉구
- G7 주도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(PGII) 확대나 개발은행(MDB) 역할 조정 등이 가능한 대안으로써 언급될 전망

○ 첨단산업 투자규제 등 대중 규제 관련

- CSIS는 일본이 수출통제 체제 조정이 이번 G7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을 조명
- 미국 등 G7 국가들은 현 바세나르 체제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(new regime)를 모색
- 로이터는 독일 정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대중 투자규제는 전반적인 경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략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설계될 것이라 보도
- 지난 4월, 언론들은 미국의 반도체, AI, 양자 컴퓨팅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대중 투자규제 행정명령 발표가 임박했다 보도하며, 미국이 G7에서 국제적인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 전망

○ 그 외 글로벌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 완화 방안,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

③ 핵무기 확산 방지

- 일본, 핵무기 관련 G7 정상들의 공동성명 기대
 - 러-우 대치에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,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핵전쟁 발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
 -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고향이자 핵무기가 사용된 두 도시 중 하나인 히로시마를 이번 G7 정상회의 장소로 선택
 - 4월에 있었던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핵무장 해제 및 핵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지지가 채택된 상황으로
 - 단, 일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별도 연설은 없을 것이라 보도

④ AI, 기후변화, 미국 부채한도 등

-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장관급 의제에서 정상회의 의제로 편입
 - 기시다 총리는 최근 ChatGPT 개발사 OpenAI의 샘 알트만 최고 경영자를 만나는 등 G7 정상들의 이목이 AI에 집중
 - 정부 서비스 등에서의 접목 등 AI 활용방안과 더불어 EU AI법, 미국 척 슈머 의원의 AI 법안 등 규제에 대해 논의 진행 전망
 - G7 기술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AI 정책과 규제는 인권보호와 근본적인 자유,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밝혀
-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검토
 - '30년까지 해양 풍력(150GW) 및 태양광(1TW) 발전 용량 확대
 - 단, 일본은 천연가스를 10~15년 동안 활용 유지를 희망
 - * 또한 2030 석탄발전소 퇴출 목표도 일부 국가 사정으로 유보
 - 2040 플라스틱 공해 제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추진

- 미국 정부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
 -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미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논의
 - 엘런 미 재무장관이 미 정부 디폴트는 있어선 안 될 것이라 언급한 가운데,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장은 미 연준의 힘만으로는 미 디폴트의 여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의견

□ 참고사항

- 기시다 일본 총리, G7을 앞두고 아프리카 방문
 - 러시아와 중국 관련 의제에서의 “글로벌 사우스” 지지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평가
- 바이든, G7 이후 파푸아 뉴기니 방문 예정
 - 현직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중국의 태평양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
 -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솔로몬 제도,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가에 대사관 신규 설치를 발표하는 등 관계 확대에 노력
- 독일의 중국 관련 신중한 움직임
 - 독일은 중국 중국원양해운의 함부르크 톨러르트 항 지분 취득을 희망했던 35%에서 24.9%로 하향 조정하며 최종 승인
 - 아울러 로이터는 독일이 EU의 대러시아 제재를 역외로 확대하는 것에 비판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장석일
■ 자료원	CSIS(5.9), FT(4.24), Atlantic Council(5.10), 로이터(5.10), JapanTimes(5.10) 등

□ (IRA) 재무부, IRA 청정에너지 추가 세액혜택 관련 세부 지침 발표

- (개요) 재무부,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지침 발표
 - 이번 발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내 프로젝트 및 시설에 대한 투자 (ITC) 및 생산(PTC) 세액공제에 더해 추가로 제공될 수 있는 미국산 요건 충족 혜택(domestic content bonus)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공개
 - 특히 태양광, 풍력 및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치에 대한 혜택 제공을 명시함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 및 공급망 확장을 목표로 추진 중
- (상세) 미국산 최소 요건 충족하면 최대 10% 추가 세액 공제 혜택
 -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등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기존 제공 되는 혜택에 미국산 최소 요건 충족 시 추가 세액 공제 자격 부여
 - 최소 요건으로는 모든 철강 및 철 제조 공정은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으며, 시설을 구성하는 제조 제품 및 제품 구성 요소는 미국에서 채굴, 생산 또는 제조된 제품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
 - * 미국산 강철, 철강, 제조 부품은 최소 40% 이상 필요
 - 단, 제조된 제품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구성 요소가 미국산이면 하위 구성 요소의 출처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
 - * 제조된 제품의 구성 요소는 “조정 비율 규칙(adjusted percentage rule)”에 따라 산정
- (반응) 중국 태양광 셀도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 세액공제 대상
 - 미국 태양에너지 제조연합은 국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을 확장하고 기후 목표를 (더)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 표명
 - 현지 언론은 미국의 탈 중국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 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앞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생산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
 - * 현재 중국은 웨이퍼와 웨이퍼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시장 공급의 약 95% 차지(WP, 5.12)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■ 자료원	재무부(5.12), 폴리티코(5.12), 워싱턴포스트(5.12)

□ (TTC) 미국-EU 4차 무역기술협의회(TTC) 주요 예상 의제

- (개요) 美-EU, TTC에서 양자 협력논의 구체화 전망(5.30~31)
 - 현지 언론은 TTC 협상문 초안을 바탕으로 미-EU 간 주요 협력 예상 의제 다섯 가지를 보도, 최종 공동선언문으로 확정 여부는 유동적
 - * 무역기술협의회(Trade and Technology Council, TTC)는 '21년 9월 공식 발족
- (상세) 중점 의제로 AI, 디지털 분야 지목, IRA 무역협정과 친환경 논의도
 - (인공지능) TTC 중점 안건으로 디지털 분야 지목, 특히 양자 간 인공지능 공동 표준 마련에 관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 될 것으로 전망
 - * OECD 및 G7 회원국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공동 지향점 조율 논의
 - ** EU는 인공지능법(AI Act) 등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 견지 중
 - (디지털 서비스) 페이스북, 구글, 틱톡 등 내년 발효될 EU의 '디지털 서비스법(DSA)'상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 주요 내용 협의 예정
 - (국제표준) '6G Outlook 프로그램'을 출범을 통해 차세대 통신 표준에 관한 협력을 지원, 중국의 통신 국제 표준 개발 노력에 공동 대응
 - (반도체) 양측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정보의 상호 교환을 촉진하고 양자 간 반도체 보조금 경쟁 확산 방지에 협력
 - (기타) EU는 동 채널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보조금과 관련 일본이 체결한 협정과 유사한 배터리 광물 요건의 완화를 추진 중
 - * 블룸버그 통신은 당초 논의되고 있는 5대 핵심 광물(코발트, 흑연, 리튬, 망간, 니켈) 외에도 잠정적으로 핵심 광물 목록은 50개 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(4.28)
 - ** 아울러, 녹색 전환 관련 범대서양 이니셔티브(TIST) 출범 논의도 다뤄질 전망(5.11)
- (전망) TTC 역할 중요성 확인, 중국 비시장 정책 관행 퇴치 공동 노력
 - 고위 무역관계자 캐서린 타이와 돔브로브스키스는 5.9 회의에서 양측 및 세계 무역기술 문제에서 TTC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재차 확인
 - *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의료기기 분야 등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해 견해와 정보를 교환했으며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명시

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

■ 자료원 | 폴리티코(5.10), 인사이드트레이드(5.10)(5.11), EURACTIV(5.4), 블룸버그(4.28)

□ (수입규제) 상무부, 반덤핑·상계관세 집행 강화 목적 규정 개정안 발표

- (개요) 美 상무부는 반덤핑(AD) 및 상계관세(CVD) 법률 관리를 통해 무역 구제책 집행을 개선 및 강화하기 위해 규정 수정 제안 (5.9)
 - 상무부는 7.10까지 이번 AD 및 CVD 규정 개정과 관련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, 이를 반영해 추후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.
- (상세) 절차 개정, 관행의 성문화, 방법론 향상 등으로 규제 수단 강화 목적
 - (1) 반덤핑·상계관세 적용 대상 범위 확대
 -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△수수료·벌금·과징금 징수, △지식재산권 침해 규제, △인권·노동권·환경 법규 등 집행에 소홀한 경우, 이를 반덤핑·상계관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제화
 - (2) 특별시장상황(PMS) 여부 결정 방법론 개정
 - PMS 적용 시에 ‘판매 기반’과 ‘원가 기반’ 시장 상황을 명확히 정의하고,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, PMS 상황 판단 시 참고할 12가지 시나리오를 적시함으로써 집행 혼란 최소화
 - 상무부는 PMS의 각 유형이 상이하야 분석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함을 인정하며, 개별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의 필요성 제기.
 - 따라서, 비용 왜곡에 대한 정량화가 불가능한 경우,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통해 조정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- (3) 국경 간 보조금 관련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제한 해제
 - 상무부 ‘Transnational Subsidies Regulation’을 삭제함으로써, 국내 외에도 해외 보조금(Cross-border)으로 상계관세 조사 확대 허용
 - 현지 로펌 Wiley Rein 분석에 따르면, 중국의 ‘일대일로’를 통한 해외 보조금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대응책 성격

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

■ 자료원 | 미국 관보(5.9), 인사이드트레이드(5.9 / 5.10.), Wiley Rein(5.10.)

□ [투자] 美 상무부, 지역 기술 및 혁신 허브(Tech hub) 유치 신청 개시

- (개요) 지역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테크 허브 유치 경쟁 시작
 - 핵심 기술을 제조, 상용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여 기술 및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고안된 지역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로,
 - 반도체과학법 기반, 자국 제조업 육성,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국내 지역 파트너 간 협력, 기술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 등 목표
- (상세) 미국 투자 유치(Investing in America)의 일환으로 인공지능, 로봇공학, 첨단 에너지 산업 등 미래 기술 산업단지 육성
 - 테크 허브 유치 신청 시작(5.12): 3개월 동안 해당 지역이 10년 안에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그룹이 될 수 있는 강점이 있는지, 자원이나 경제력 등 지역 경쟁력을 평가
 - 지원 대상: 컨소시엄만 지원가능, 컨소시엄에는 학계, 민간 부문, 정부, 연방 연구소 및 노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가능
 - 대상 산업: 인공지능, 기계 학습, 반도체, 로봇공학, 자동화, 생체 인식 데이터, 사이버 보안, 첨단 원자력 기술 등 첨단 산업·기술 10가지
 - 보조금 지원절차: 5월 12일 공개된 보조금 지원 공고(NOFO) 통해 신청
- (참고) 전국적으로 테크허브 확산 위한 추가 지원 계획 중
 - 전국적으로 최소 20개의 Tech Hubs를 지정하고 약 1,500만 달러의 전략 개발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할 예정
 - * 올해 말, 신청 자금 이행에 대한 두 번째 NOFO 게시 예정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박소현
■ 자료원	상무부(5.12), 경제개발국(5.12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p>The U.S. and China Are Finally Talking Again (미국과 중국, 마침내 대화 국면으로)</p> <p>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위원의 비엔나 회동, 번스 주중 대사와 친강 외교부장의 대화를 통해 양측은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</p>
The Washington Post	<p>Biden faces major challenges with the end of the Title 42 border policy (바이든, 타이틀 42의 해지로 중대 시험대에 오르다)</p> <p>타이틀 42는 트럼프 행정부 때 발동, 지난 3년간 260만명의 월경자를 추방. 신규 국경 관리 지침으로 변경됨에 따라 월경자들의 숫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.</p>
New York Times	<p>U.S. Faces 'Significant Risk' of Running Out of Cash in June, C.B.O. Warns (의회예산처, 미국 6월 중 지불능력이 다할 가능성 높다 경고)</p> <p>의회예산처는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이 금융 및 경제 위기와 조달금리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 경고. 부채한도 상향 두 번째 미팅은 다음주로 예정.</p>
CNN	<p>The real reasons chain stores are closing in big cities (대도시에서 체인점이 폐업하는 진짜 이유)</p> <p>최근 노드스트롬, 스타벅스 등 유명 체인점이 대도시의 변화가에서도 폐업하는 경우가 급증. 지역경제 건전성을 위해서도 대도시 유통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</p>
USA Today	<p>Bigger than the New Deal? Biden's infrastructure law by the numbers (“뉴딜보다 클까” 숫자로 보는 바이든 인프라법)</p> <p>인프라법 발효 후 약 32,000개의 프로젝트 대상으로 2,200억 달러를 지원. 백악관은 뉴딜보다 더 큰 투자라 자평하는 가운데, 선거전에서는 아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</p>

* 미국 동부시간 5월 12일 16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14	미국 반도체 R&D 지원 정책 방향	2023.04월
US23-13	미 환경보호청(EPA)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4월
US23-12	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	2023.04월
US23-11	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	2023.03월
US23-10	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3월
US23-09	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	2023.03월
US23-08	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	2023.03월
US23-07	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	2023.03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해드림 심층보고서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01월
US22-기 획6	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5	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4	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☜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1 (2023.5.8)		
코인시-10 (2023.4.17)		